

전남대병원 노조원 부당업무 강요받아

전남대학교병원 노동조합에 소속된 간호사 중 64.4%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전남대병원 간호사들은 시간외 근무 수당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각종 감시 활동 등으로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남대병원지부가 공개한 '전남대병원 감시 및 인권 유린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 병원 간호사 246명 중 151명(64.4%)은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청소·집나르기·풀뽑기·주차관리 등)를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인증평가 시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 행위'와 '커피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상급자 또는 의사의 지시 행위'를 강요받은 간호사도 각각 176명(71.5%), 47명(19.1%)에 달했다.

'고위직(이사·병원장·임원·고위간부 등)으로부터 집안일이나 개인 업무 등을 지시받았다'는 응답자는 16명(6.5%), '거짓 서류·문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진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정한 행동을 강요받았다'는 응답자는 7명(2.8%)으로 집계됐다.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자랑·체육·학술대회 참가를 강요받은 사례는 54.9%에 달했고, 업무와 관련 없는 행사에서 단적으로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춘 사례도 35%로 나타났다.

인권 침해 사례도 다양했다. 응답자 중 31.7%가 '교육·수습기간 등의 이유로 무급으로 일했다'고 답했다.

16.3%는 개인 사물함 검사, 핸드폰 반납 CCTV 감시를 당했고, 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경험한 응답자는 2.8%였다.

식사시간 보장에 대해서는 71.0%가 일부 보장, 17.1%는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는 응답 또한 4.8%에 그쳤다.

'시간외 수당 신청 자체를 못하게 금지한 경우'도 24.8%(62명)였고, 응급환자로 인해 1시간 이상 초과 근무를 해도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시간외 업무관련 교육, 과행사, 병동 이사, 인증평가 대비 시간외 근무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나왔다.

휴가 강제 사용을 당한 응답자는 57.3%(141명), 원하는 휴가를 제때 쓰지 못하고 휴일·특근 근무를 강요받은 경우는 44%(109명)로 집계됐다.

'환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근무시간 변경 또는 입의로 반차를 사용

31.7% 교육·수습기간 때 무급으로 일해

사물함 검사·핸드폰 반납·CCTV 감시도

57.3% 휴가강제·시간외 수당 신청 못해

하게 된 사례는 53.3%(131명)에 달했다.

차별 대우 사례도 직종(38.6%)·성별(18.7%)·학력(15.4%)·임급(13%)·인사승진(8.5%) 등으로 드러났다.

교수 또는 부처장 생일 파티를 위해 부서회비·지비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 부당한 병원 물품 구입 사례도 많았다. 항목별로는 생활용품(56.8%)·사무용품(51.6%)·

의료용품(43.0%)·근무복(33.0%)·근무복(10.4%)·환자관련용품(8.8%) 순으로 집계됐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 소모품(장갑·마스크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을 제한한 사례도 25.8%에 달했고, 부실한 감염관리 때문에 감염됐거나 감염 위험에 놓인 사례도 20.7%로 집계됐다.

과잉·무자격자 진료 불법 의료 행위, 리베이트 수수 등을 경험·목

격한 사례는 12.0%, 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사고 경험도 13.8%였다.

전남대병원 노조는 "병원 측은 인력 증원 최소화라는 방침을 두고 대체 인력 조차 충원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진행된 인사·채용 비리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병원 측은 불법 행위를 적발·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환자 안전 병원, 노동 존중 일터, 감시 없는 병원을 만들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 감시 및 인권 유린 실태조사'에는 노동조합이 표본으로 선정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00여명 중 간호사 246명과 간호조무사 4명이 참여했다.

최남규 기자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현충원 찾은 학생들 호국보훈의 달을 이틀 앞둔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학생들이 현충탑에 모셔진 위패를 보고 있다.

“사법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 침해”...신속 판결 촉구

민변 광주·전남,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30일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회와 함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일제 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와 유가족이 전반기법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業株式會社)'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지 5년 7개월, 대법원에 올라간 지 3년이 다 돼 가지만, 판결은 언제 나올지 오리무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판권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재판 등을 청와대 로비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에 대해 청구기각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 기대할 것으로 예상' 등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로 재판에 개입해 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덧붙였다.

민변과 시민모임은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밀실 합의를 주도했고 외교부는 2016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의견서를 대법원에 보냈다"며 "과거사 청산에 찬물을

끼얹었을 뿐 아니라, 노골적으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법부는 법관을 사찰하는가 하면, 특정 법관 연구모임을 해체시키려 했다. 진행 중인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며 "3권 분립과 재판 독립이라는 엄중한 헌법의 명령을 내린 것이다. 더불어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이는 직권남용, 비밀누설 등 범죄 행위이자 사법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법부는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즉각 사죄하고, 대법원은 신속한 판결을 통해 과거사 청산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정표를 세우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조인호 기자

해남서 승합차 갓길 들이받고 전복 5명 부상

30일 오후 2시19분께 해남군 옥전면 성산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11인승 승합차가 갓길 오른쪽 턱을 들이받고 뒤집혔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차모(79·여)씨 등 3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운전자 등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승합차 탑승객 대부분은 70대 이상의 여성들로, 발길을 마치고 돌아간 길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나기로 불어난 하천 고립 인부 2명 구조

30일 오전 11시36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신안교 아래 하천에서 작업중이던 인부 강모(41)씨와 최모(68)씨가 후유에 불어난 하천 물에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이들을 45분 만에 구조했다. 강 씨와 최 씨는 수질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준설작업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기상청 관계자는 "강수량은 미미했지만 짧은 시간 집중적으로 내린 소나기로 하천 물이 급격하게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돌산대교서 투신한 50대 해경이 구조

50대 남성이 30일 여수시 돌산대교에서 뛰어내렸으나 긴급 출동한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16분께 정진환을 앓고 있던 A(55)씨가 처지를 비관해 돌산대교에서 바다로 투신을 시도했으나 봉산해경파출소 대원이 구조해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돌산대교 치안센터 다리 끝단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봉산파출소 구조정과 해경구조대를 다리 아래 해상으로 출동시켰다.

A씨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확인한 해경은 바다에 뛰어들어 A씨를 구조해 119 구급차에 인계했다.

여수해경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5분께에도 돌산대교에서 투신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여수해상에서 올해만 5명이 해상으로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40대 조카가 60대 삼촌 흥기로 찢러 살해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조카가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는 60대 삼촌을 흥기로 찢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산상경찰서에 따르면 30일 낮 12시4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A(49)씨가 삼촌 B(62)씨와 말다툼 도중 흥기로 복부 등을 수차례 찢러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됐다.

아날 흥기에 찢린 B씨는 비명 소리를 들은 주민이 경찰과 소방당국에 신고했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20여 분 실시했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사는 B씨와 평소에도 좋은 감정으로 지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범 유치장 입구서 놓쳤다 2시간 만에 검거

게임방 화폐교환기를 턴 10대 청소년들이 유치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달아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30일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2시20분께 A(15)군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동두천의 한 모텔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범행에 직접 가담한 A군 등 2명을 구속수사 하기 위해 유치장이 있는 의정부경찰서로 이동했다.

의정부경찰서에 도착한 경찰은 이들을 유치장에 입감시키려고 이동하던 과정에서 A군과 B(16)군이 갑자기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달아났다.

경찰이 뒤를 쫓아 A군을 의정부경찰서 주변에서 바로 붙잡았지만 B군은 이미 경찰서 밖으로 달아난 상태였다. 경찰은 주변 CCTV(폐쇄회로) 등을 분석, 탐문수사를 벌여 2시간여 만에 경찰서 주변에서 B군도 검거했다.

